

## 최초의 총력전과 ‘국민국가체제’의 승리\*

### The Complete Victory of Nation-state System: The First World War and Its Implications

김정배 \_신라대학교

Kim, Jung Bae \_Silla University

#### I.

평자는 서평을 쓴다는 것이 더러 즐겁기도 하지만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갖고 있어 가능한 피하는 편이다. 그런데도 박상섭 교수의 『1차 세계대전의 기원』(2014.12)을 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요청해 온 분의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사학을 하는 사람으로 혹시 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책 표지를 보자마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기원’을 다루면서 왜 ‘제국의 해체’라는 부제를 달았을까? 평자는 제국의 해체는 1차 대전의 ‘결과’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서구 근대사에서 처음 발생한 국제전이 아니다. 전쟁 당시 시점에서 볼 때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30년 전쟁 이래 간헐적으로 계속된 근대적 국제전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래서 참전국의 산업화와 근대화 수준을 반영한 새로운 살상무기가 사용된 끔찍한 살육 전쟁이었다. 전쟁이 남긴 폐허와 참상은 어떤 면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확대된 유럽인의 근대적 합리성이 자초한 부메랑이었다. 전쟁의 결과 유럽의 이념, 제도, 문화는 물론이고 세계적 차원의

---

\* 박상섭 『1차 세계대전의 기원: 패권 경쟁의 격화와 제국체제의 해체』(아카넷, 2014)에 대한 서평.

정치적 경제적 구조 또한 변했다. 제국의 해체와 공화국의 탄생(사회주의 공화국을 포함하여), 정부의 경제주체로서의 제도화 및 세계금융질서의 변화, 여성의 지위 향상과 대중민주주의 등장,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확산, 미국과 소련의 이념과 힘의 확대 및 유럽세력의 약화, 그리고 식민지민족주의운동의 성장 등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더구나 전쟁 이후 동아시아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차 세계대전이 세계사적으로나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박상섭 교수가 1차 세계대전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박 교수는 이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의 미진함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작업이 작금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 교수가 어떤 시각과 방법으로 1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지 그 핵심으로 보이는 바를 정리하고 약간의 논평을 더하고자 한다.

## II.

박상섭 교수는 1차 세계대전을 기본적으로 제국체제로부터 국민국가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국가의 성장과 확대 과정을 통해 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5세기에 걸쳐 “일상화된 전쟁을 바탕으로” 확립되었으며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이 대내적 대외적 권력구조의 변동을 수반하고, 전쟁과 혁명이라는 폭력 과정을 불러일으키고, 제국체제 내의 피압박 민족의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박 교수는 1차 세계대전에서 국민국가의 능력이 제국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1차 세계대전은 최초의 총력전으로 한 사회의 거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했는데, 국민국가는 그 기능에서 제국보다 더 효과적인 체제였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참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국민적 태도, 즉 민족주의의 성장을 국민국가의 ‘완성’으로 본다.

박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유럽 국제정치 구조를 수준을 달리하는 두 세력의 대립과 갈등으로 설정하는데, 하나는 1870년 독일 통일 이후 유럽 국제정치에서 헤게모니를 둘러싼 영국과 독일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1908년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합병 이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갈등이다. 박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독일이 세계정치의 주도권을 노린 것은 “내부적 성장의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러나 식민지 확보 사업에서 기득권을 가진 영국이 독일의 도전에 대응하여 당시까지의 비동맹체제를 포기하고 해군력 경쟁을 가속화하자 재정적 부담을 느낀 독일은 영국에 대한 도전 정책을 완화하고 “제국주의 정책 목표를 축소하여 유럽에서의 헤게모니 지위 확보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경쟁이 무력 대결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 발칸 지역의 사태를 통해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박 교수는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국 사이의 외교 교섭이 실패하고 전쟁으로 간 것은 군사지상주의(militarism) 분위기가 팽배하고 “폭력 과정을 불가피하게 끌어낸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그러한 갈등이 “국제적 동맹 관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권력구조의 최상위에 있던 두 나라의 대결구조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박상섭 교수 주장의 핵심은 이렇다. 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국민국가 유형 국가들과 제국 유형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전쟁의 결과 국민국가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국가가 자원을 동원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는데 훨씬 효과적인 체제였기 때문이다. (보론에 포함된 내용은 1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책임론’을 중심으로 논쟁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 Ⅲ.

박상섭 교수가 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한국적 연구 현실에서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가가 보기에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박상섭 교수는 1차 세계대전을 단순히 외교사나 전쟁사보다는 ‘역사사 회학적 맥락’에서 보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 역사사회학적이 어떤 개념인지 내용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외교사든 전쟁사든 대개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다루기 마련이며 박 교수 또한 그러한 접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역사사회학적 접근방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려면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동원할 수 있었는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민이 왜 자발적으로 전쟁을 지지하고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각별히 독일인의 ‘공격적 심성’이 어떻게 국민적 정체성으로까지 자리를 잡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국주의 군부의 독자적 행위에 힘이 실리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독일은 단순히 팽창 욕구 때문에 유럽을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독일 이념을 세계에 이식해 독일이 중심이 된 평화와 자유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독일의 ‘윤리적 사명’은 국민의 심성구조와 지배엘리트의 지적 토대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둘째, 박 교수는 국민국가와 제국체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국민국가가 자원동원에 더 효율적임을 1차 세계대전이 ‘증명’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박 교수의 주장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당시 독일은 체제상 제국이었으며 자원의 동원, 특히 국민의 적극적 호응과 지지를 확보한 측면에서는 국민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더구나 독일이 패한 것은 미국의 참전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작용했다. 그리고 박 교수도 지적하듯이 공격적이든 해방적이든 민족주의가 역사적 추세였기 때문에 제국의 해체는 어찌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1차 세계대전에서 마치고 국민국가와 제국이 체제 우월을 다투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식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셋째, 박 교수는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과 영국 사이의 일련의 사건이 그들 사이의 무력 대결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 발칸 지역의 사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수궁하기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영국과 독일의 갈등과 경쟁이 반드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박 교수의 주장에는 당시 독일의 공업생산력과 식민지시장의 부족이라는 모순적 현실이 물리적 시장재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독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전쟁을 당연시하게 된 점을 간과한 듯하다. 아니면 국제적 권력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국가들은 위기 조정 능력이 있는 반면 하위 수준의 국가가 전쟁을 야기하는 매개 기능을 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박 교수는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전쟁 발발은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적어도 영국은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영국과 독일의 대결 가능성이 낮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전쟁을 필요로 하는 최상위 국가에게 하위 국가의 통제하기 어려운 행위는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런 경우였다.

넷째, 박 교수는 보론 이외에 연구의 지형도를 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역사사회학적으로 접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앞서 지적한 3가지 문제는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평자의 판단이다. 기존의 연구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도 ‘연구’이다. 그러나 주제에 대한 지식의 역사가 없는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 책이 연구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서두에서 얘기 했듯이 책의 내용은 ‘패권 경쟁의 격화’를 다루었지 ‘제국의 해체’를 다루고 있지 않다.

#### IV.

박상섭 교수는 최근 우리 주변의 상황을 1차 세계대전 직전의 국제 상황에 “비견될 만큼” 세계 정치상 세력 판도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작업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아마도 중국의 부상으로 야기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두고 하는 말인 듯싶다. 물론 그렇게 볼 만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급이 박 교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각별히 미일동맹 강화의 분위기에서, 오독과 오용의 소지도 있어 보여 다소 우려스럽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들)가 정치적 전략적 목적에서 국내적 국제적 상황을 왜곡하여 오랫동안

안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중국은, 독일처럼 전쟁을 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으며,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어야 평화와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지도 않고, 대중의 비판 능력의 결핍을 필요로 하는 군국주의와 전쟁찬양주의도 없으며,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냉전시대에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급 성장과 팽창에 대한 과민 반응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평을 의뢰한 분에게나 저자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호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소 거칠게 평하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평자의 비판적 논평과는 상관없이 박상섭 교수의 저술은 세세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읽기가 쉽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다. 국내 학계와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1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